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총칼 휘두르는 군사독재정권 앞에서는

뒤죽박죽이다. 오로지 부귀영달과 이익들의 배 채우기에만 열심이다. 정치인을 말이다.

세계도, 문화계도, 사회복지계 등 기타 분야도 그렇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력자와 연줄이 없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 세치 혀 놀림은 청산유수다.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서라고, 이러니 서쪽하늘만 쳐다보고 허허로운 웃음이나 날릴 수밖에. 날마다 이진투구에만 열 올리는 쪽승들. 어떻게 국민을, 국가를 위한다는 교활한 설을 펼 수 있을까.

조그만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전남의 매우 외곽지역에 설립된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재 관장의 나이가 65세를 넘었다. 시설장의 정년은 65세인데도. 관계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그럴까. 군수와 가깝기 때문일까. 여하튼 보룡사이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법정정년이 되면 다 퇴직하는데, 그런데도 굶이 무자격자를 앉혀놓는 이유는 뭘까. 수탁법인이 바뀌지는 과정에서 의혹스런 것들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현재의 관장을 앉히기 위해 그랬다는 등등의. 이렇게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니 그보다 더 큰 곳에서는 어떨겠는가.

중앙정치는 더더욱 그럴 거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서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들 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못된 작태를 부린 당사자와 그 아류 몇 명만은 빼고, 유권범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의 표본 아닌가. 자고로 민초들은 언제나 짓밟히고만 살았다. 허 빠지게 일해 곡식을 거둬도 그 과실의 대부분은 힘 있는 못된 인간들이 다 가져갔다. 어떠한 이유를

불어써든 간에, 그러니 애국정신이 생기겠는가. 누구를 위한 애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명명거리는 자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외국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들 대부분은 외국에 부동산 등 재물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 한다.

진짜 이런 짓거리들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 문제다.

또 한 가지 그야말로 엄청나게 신기한 것은 그렇게 꺾박받고, 예쁜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의무 아닌 의무까지 다하는 대다수의 민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땅을 지킨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실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킨 5·18민주화운동, 더 멀리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선언을 담당해 외친 3·1기미독립운동 등이다. 역사의 큰 전환점마다 민초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항상 거기까지였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과실들은 몇몇 정치모리배 등 힘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적 세우기에만 열심이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 지금의 정치인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 대다수는 그 당시에 뒤흔었다. 그 조상들도.

현존한 그들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29민주화선언 때 뛰었나 말이다. 혹시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도서관에서, 외국에서 아니면 조용히 웅크리고 숨어 있지 않는지를 묻고 싶다.

총칼 휘두르는 군사독재정권 앞에서는 뛰었는지도, 오히려 그들에게 빌붙어 온갖 호사를 다 부리지 않았는지도.

특히 그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뛰었는가. 제발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서 대답 좀 해봐라. 제주를 굶이 넣고 돈은 대국 놔미 가져간 꼴만은 아니길 바란다.

언제나 그랬다. 강한 권력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든지, 아니면 빌붙든지. 그러다가 평화 시가 되면 제일 먼저 낮 짝 내밀고 쾅파리 춤추는 후안무치한 짓들만 했다. 평생을 참으로 추잡한 작자들 아닌가. 용서하기 힘들.

社說

가계부채 속도 조절해야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증가속도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서 유지되고 있다니 걱정이다.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은 역대 가장 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라니 대책이 있어야겠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였다. BIS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전체 경제 규모에 육박한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로 0.9%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통계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에 중국(1.2%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압도적 1위인 중국 다음으로 2위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은 2014년 중반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서부터다.

지난 4년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이 13.8%포인트로, 중국(16.2%포인트)에 이어 2위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8분기 연속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상승 기간 역시 중국에 이어 2위다.

BIS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7위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GDP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상승세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은 86.1%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명목 GDP는 1천782조3천억원이고 가계신용은 1천534조6천310억원이다.

지난해 명목 GDP 증가율은 3%인데 가계신용은 5.8%로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데다가 소득에 비교해서 부담도 빠르게 확대한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고

김충관 원도해양경찰서장



국민이 누리는 안전한 바다와 해양경찰

겨울의 차디찬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 곁에 향긋한 봄 냄새가 다가오면서 바다를 찾고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돌아왔다.

바다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일탈이 허용되는 안식처이자 휴식을 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자칫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다중이용선박 관련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관광객·낚시객·레저객 등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 인만큼 (최근 3년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3,450만명) 해양경찰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실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해상조난사고는 총 3,434건으로 2015~2017년 평균(2,913건)보다 17.9% 증가하였고, 단순·경미사고(2018년 2,049건)와 레저·소형선박 사고(2018년 2,374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8년 기준 사건접수(인신고 등 제외)는 총 23,903건으로

이중 해양사고가 5,404건, 범죄신고 1,864건, 해양오염 581건, 민원신고 3,929건, 기타 각종 신고가 12,125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경비·안전·수사·방재 등 분야별 업무가 다양하게 분포하여 지역사회와 협조 없는 해양사고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첫째, 민간구조세력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넓은 바다에서 해양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해양사고 발생 시 어촌계와 지역구조대, 인근 조업선 등 민간구조 세력과 연계한 사고 대응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2018년 12월 16일 오전 5시 9분 경 여수 거문도 남방 해상에 탱커선과 어선이 충돌하여 해경과 민간어선이 합동으로 승선원 11명을 전원 구조한 사례를 교훈 삼아 靑島眞(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油斷(유단대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뜻으로 수명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거센 파도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비단 불꽃이뻔만 아니라 항해·조업하는 선박의 발견 소홀, 선장의 졸음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연료 고갈, 여러 가지 장비 교체점검 미비 등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해양사고의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므로 바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훈련참여를 통해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양사고를 대비해 해양경찰은 상황실·경비정·파출소·구조대 등 구조세력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에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 없는 자체훈련은 사고의 발생초기 처리와 수습에 한계가 있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형 해양사고 발생에 대처하는 대규모 방재훈련, 국민 참여형 민관군 합동 수난대피 기본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해양사고 평균 대응시간이 2018년도 35.2분으로 2015~2017년 평균(36.9분) 대비 1.7분 단축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2018년 해양사고 인명 피해는 89명으로 2015~2017년 평균(106명) 보다 16% 감소하였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요처리 상황에 대한 사후 브리핑과 결과를 분석하여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선제적인 활동과 자기주도 근무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오늘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으며, 바다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엄정한 질서를 세우고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든든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孔 匡  
懷 品  
兄 行  
弟 友

孔 懷 兄 弟

▷ 뜻 : 형제(兄弟)는 서로 사랑하여 의롭게 지내야 함.

<p>湖南新聞</p> <p>대표전화 (062) 224-5800</p> <p>편집국 (062) 222-5547</p> <p>팩스 (062) 222-5548</p> <p>광고국 (062) 222-5544</p>	<p>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p> <p>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p> <p>TEL (02) 2238-0003</p> <p>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p> <p>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p> <p>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p> <p>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p>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인본진용재단